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유정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16.

발 의 자 : 유정주 · 안민석 · 고영인
서동용 · 김병욱 · 임오경
신동근 · 박재호 · 이상현
김철민 · 김민석 · 양향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수십 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 부족과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임.

이에 이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,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의 명문화 및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3조, 제18조의3, 제18조의4 및 제22조).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함양하여”를 “함양 및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”로, “생활을 영위하게 하며,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”을 “생활의 영위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권장”을 “권장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국민체육 진흥”을 “국민체육 진흥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, 법률 지원, 임시보호 및

연계

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구상권 행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의 제목 “(고발 및 징계요구)”를 “(조치 및 고발·징계요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① 지방자치단체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성폭행 및 폭행, 협박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자 및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1항제11호의3 중 “피해자”를 “신고자·피해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 하고, 건전한 정신을 <u>함양하여</u> 명량한 국민 <u>생활을 영위하게</u> <u>하며,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</u> <u>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</u> <u>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함양</u> <u>및</u> <u>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</u> ----- ----- <u>생활의 영위</u> ----- -----.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<u>권장</u>)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국민체육</u> <u>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</u> <u>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</u> <u>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<신 설></u>	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<u>권장 등</u>) ① ----- <u>국</u> <u>민체육 진흥 및 체육인의 인권</u> <u>보호</u> ----- ----- -----. ②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제</u> <u>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 센</u> <u>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</u> <u>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</u> <u>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</u> <u>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</u> <u>다.</u>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	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

<p>립) ①・② (생 략)</p> <p>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피해자에 대한 상담, 법률 지원 및 연계</u></p> <p>3.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<u>실태조사</u></p> <p>4・5.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⑤ ~ ⑦ (생 략)</p> <p>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8조의4(고발 및 징계요구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립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, 법률 지원, 임시 보호 및 연계</u></p> <p>3. ----- -----<u>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</u></p> <p>4・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구상권행사의 절차・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⑥ ~ ⑧ (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</p> <p>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8조의4(조치 및 고발・징계요구) ① <u>지방자치단체와 스포츠</u></p>
---	--

<p>①・② (생략)</p> <p>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,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.</p> <p>1. ~ 11의2. (생략)</p> <p>11의3.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<u>피해자</u> 지원</p> <p>12. (생략)</p>	<p><u>윤리센터는 성폭행 및 폭행, 협박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자 및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・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제3항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의3. ----- -----<u>신고자·피해자</u>----- -----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